
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

2015. 3. 17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----------------	---

【별첨】 금융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와 새로운 접근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금융개혁 방향	4
-------------------	---

1. 자율책임 문화 조성	5
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실물지원 역량 강화	6
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금융산업 경쟁 제고	7
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추진 전략	8
------------------	---

I. 추진 배경

- 금융업은 '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 성장(금융자산 '97말 944조원 → '14.9말 3,575조원)
 - '97년 경제위기, '03년 카드사태, '08년 금융위기 등에 대응
 - * '97년 통합감독기구, '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, '05년 개인신용평가제도, '09년 채권시장안정펀드·금융안정기금, '13년 바젤III 등 자기자본 확충 등
 - 동시에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및 선진금융제도 도입
 - * '98년 지배구조, '00년 금융지주회사, '04년 거래소 통합 및 PEF '06년 퇴직연금, '09년 통합 자본시장법, '11년 헤지펀드, '13년 코넥스 등
- 양적·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낮고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
 - ① 인력·시스템 등 역량, 수익구조 등에서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, 해외진출도 미미한 수준
 - * '13년 국내 은행지주 세계 순위 : KB(68위), 신한(69위), 우리(75위), NH(104위)
 - ②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,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의 역동성·혁신성 부족
 - * '12년 시가총액/GDP : 한국 96.5, 스위스 171.0, 영국 122.7, 미국 114.9
'12년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(472조원)의 99%(466조원)가 융자에 의존
 - ③ 저금리, 고령화, 금융과 IT융합 등 환경 급변에도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, 고비용·저효율 구조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
 - * 총 고용 중 금융업 고용비중(% , 통계청): ('94)3.5 → ('06)3.4 → ('13)3.4
 - ④ 금융당국의 세세한 사전규제·검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, 동양사태, 개인정보유출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신뢰 저하

- 금융의 자금중개 역할 및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, 금융권의 보수적 행태 등에 기인
 - 선진국에 비해 낡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와 적발위주 검사관행, 비명시적 구두·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
 - 금융회사는 담보·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방식에 안주하고, 단기대출 증가 등 '비울 때 우산빼기 관행'도 여전
 - 해외·비금융 분야 및 고령화 등 금융수요를 감안한 신시장 개척, 신상품 개발보다는 국내에서 예대마진 중심의 출혈경쟁 지속
 - 금융혁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, 현장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실제 인식·관행 변화는 미진

➔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을 과감·신속 추진(適期이자 마지막 기회)

- 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금융감독 쇄신과 규제개혁 추진
- ② 금융회사는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역량을 확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율책임문화 정착
- ③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등 혁신적인 자금중개시스템 구축
- ④ 非금융분야와 융합,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新시장을 개척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
- ⑤ 부처협업을 통해 연기금·세제·외환 등 금융과 시너지가 있는 개혁과제들을 함께 추진하여 금융업 발전 도모

□ 박근혜정부 들어 “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”를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

* 금융비전('13.11) → 금융규제개혁('14.7) → 창조금융 실천계획('14.8) →

금융혁신위('14.9~, 종합검사 50%·직원제재 90%감축/ 은행혁신성평가 도입 및 은행 내부관행개선/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추진/ 행정지도·가이드라인 정비 등)

□ 그러나, 금융현장(금융사 및 기업)의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

① (감독 관행) 수차례 방향성만 제시, 현장에서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, 변하지 않는 실무자의 일하는 방식 등이 지속

* 구두지도와 사전개입, 규제와 제재대상 여부인지 불확실 등

⇒ 선진화된 구체적 방안 제시, 현장 소통, 실무진 마인드 개선

② (실물지원 측면) 기술금융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, 은행 대출 중심으로 혁신부문에 자금공급은 여전히 부족

* 기술금융의 외형적 실적 올리기, 신규업체 발굴 노력 부족 등 지적

⇒ 기술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투자도 함께 육성

③ (혁신과 규제개혁) 정부 주도의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역량 및 일선 인식 변화와 실천은 미흡

⇒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자율정착 유도

④ (성과평가) 제도개선의 현장 전달 및 체감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회사·이용자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

⇒ 외부전문기관의 현장 체감도 분석 등 점검·평가·보완 지속

⑤ (금융연관분야) 연기금, 세제, 외환 등 금융업 발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 노력은 부족

⇒ 부처 협업을 통해 금융업 외연 확대, 시너지 제고 전략 추진

II. 금융개혁 방향: 3대 전략, 6대 핵심과제, 18개 세부과제

◇ “경제 활성화”를 위한 금융개혁 ◇

◆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『3대 전략, 6대 핵심과제, 18개 세부과제』를 우선 설정

3대 전략	6대 핵심과제	18개 세부과제(안)	
I. 자율 책임 문화 조성	① 금융감독 쇄신	① 감독·검사·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② 금융회사 수수료·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③ 「금융개혁 현장점검반」 운영	
	②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	④ 혁신·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⑤ 내부통제·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⑥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	
II. 실물 지원 역량 강화	③ 기술금융 확충	⑦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⑧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⑨ 전문조직구축·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	
	④ 자본시장 기능 강화	⑩ 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⑪ 사모펀드·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⑫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	
III. 금융 산업 경쟁 제고	⑤ 핀테크 육성	⑬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⑮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	
	⑥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	⑯ 금융규제 유형별(Category) 강화·완화 ⑰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⑱ 신상품·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, 외환규제 개선	
접근 방식	현장 중심	벤치 마크	상시 평가

* ①, ③, ⑤ : 2.23일 청와대 발표 24개 핵심개혁과제 포함 과제

1 자율책임 문화 조성

① (금융감독 쇄신) 감독당국 역할 재정립 (코치 → “심판”)

① (감독·검사·제재 개선)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감독·검사·제재 전체 프로세스(process)를 혁신

- 개인에 대한 확인서,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 정착
- 개인제재를 기관·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,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 등

② (시장기능 존중) 금융회사 수수료·금리·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 보장

-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, 금융상품간 비교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의 성숙을 전제

③ (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) 금융위·원 합동 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, 규제, 관행을 발굴·해결

- 특히,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,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(No Action Letter 활성화)

② (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) 역량 강화, 내부통제 강화, 금융소비자 보호 등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

④ (보수적 관행 혁신) 혁신성평가지 은행 역량강화 및 혁신 노력 (조직·인력, KPI, 성과평가 등) 평가를 강화하여 변화 유도

⑤ (금융사 자율책임 정착)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·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, 금융 윤리규범 정립 ⇒ 소비자 보호 강화

- 금감원의 ‘금융소비자 보호’ 역량 및 조직을 강화

⑥ (창의적 금융 우대) 제재·면책시스템을 개선하고, 창의적·혁신적 임·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·보상체계 구축

2 실물지원 역량 강화

③ (기술금융 확충)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 기술금융이
착근되도록 하고, 투자방식 기술금융 공급도 확대

⑦ (실태 조사 및 개선)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·벤처·창업기업 등
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질적 보완

- 특히, 위험부담이 큰 창업·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이
확대될 수 있도록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

⑧ (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)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,
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*하여 Two-track 지원체계 구축

*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3천억원(성장사다리 1천억), IP펀드 1천억원 조성 등

⑨ (전문역량 확충) 금융회사 스스로 전문조직 구축, 인력양성 등을
통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

④ (자본시장 기능 강화)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

⑩ (인프라 개편)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
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

⑪ (사모펀드·모험자본 획기적 육성) 사모펀드의 설립·운용·판매
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

-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*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
자본시장과 M&A를 통한 회수기회를 대폭 확대

*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, 코넥스 운영방식 전면개편 등

⑫ (국가자산·금융 상호발전)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* 운영에 국내
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

* '14.9월말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,263조원(전체 금융자산의 약 31%)

3 금융산업 경쟁 제고

5 (핀테크 육성) IT·금융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 추진

13 (핀테크 생태계 구축) 핀테크사·금융사·정부가 “민·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”를 구성하고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·개선

- 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「핀테크 지원센터」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·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 해결

14 (인터넷 전문은행 도입) “금산분리”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“비대면” 실명확인 허용 등 6월말까지 도입방안 마련

15 (빅데이터 활성화)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

- ※ 「금융보안원」을 4월중 설립하고, 금융사 스스로 IT·보안투자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 구축

6 (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)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“자율제고+경쟁촉진”을 위한 규제 개선

16 (금융규제 유형화·개선) 금융감독 역할 변화(코치→ 심판)에 맞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(Category)하여 강화 또는 완화

- * 시장질서·소비자보호(강화), 영업·건전성 규제(국제기준·역량별 합리화)
- 금융위·금감원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중복부담 해소

17 (칸막이 규제 완화) 업무영역·판매채널 확대,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경쟁·융합촉진 규제 개선

- * 복합점포 활성화(보험, 非계열 확대 등),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,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원칙 폐지 등

18 (신상품·신영역 개척 지원) 저금리·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계 개선

- * 독립투자자문업(IFA)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,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(IWA 등)에 맞춰 정비
-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,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

Ⅲ. 추진 전략

- ① (추진 체계) 선진사례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,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



- ① 「**금융개혁회의**(의장: 민간위원)」 : 경제, 산업, IT,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 ⇒ 광범위한 의견수렴
 * 현행 “금융혁신위”를 금융·경제·산업·학계 대표 등을 포함해 확대 개편
- ② 「**금융개혁추진단**(단장: 금융위원장)」 : 관계부처 1급(기재·미래·산업·중기청 등)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 ⇒ 협업으로 신속 추진
 ※ 부처 협업과제는 “경제관계장관회의”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
- 「**금융개혁 자문단**」 : 학계·연구원 및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~30인 ⇒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 제시
- ③ 「**금융개혁 전담조직**(금융위·원 합동 상설조직)」
 * 금융위에 「(가칭)금융개혁 총괄국」을 설치하고, 금감원에도 금융규제·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
- 「**금융개혁 현장점검반**」 : 우선, 금융위·원 합동 점검반 구성 ⇒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·해소
 * 현장에서 요청하는 금융개혁 과제를 취합하고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, 제재대상인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현장애로 해소

② (추진 방식) 금융현장 중심,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평가 강화

① “금융현장 중심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

- 위원장이 매주 1~2회 현장방문 ⇒ 점검 및 현장애로 청취
 - * 기술금융·중소·벤처·창업·상장·IT 기업 등 현장 방문, 금융회사 권역별 실무자, 금융소비자 등 간담회 추진
- 위원장 참여 「金요회」 신설 ⇒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,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
-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방문 ⇒ 현장과 소통 활성화
- 주요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 ⇒ 개혁과제 발굴
 - * 모험투자 활성화, 고령화시대 금융부문 역할, 서민금융 활성화,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, 빅데이터 활성화, 핀테크 지원체계,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

② “선진사례”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금융권에 성공전략 제시

- 국내 금융업(은행·증권·보험)의 취약 요인 및 감독·검사·제재 개선과제 등 해외 선진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안 마련

③ 주요 대책의 인지도 및 현장 체감도에 대한 “평가 강화”

- KDI, 금융연, 자본연 등을 통해 ‘현장 체감도’ 심층조사·평가

③ (추진 일정)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제 변화를 상시 점검

-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후 추진 (※ 필요시 “경제장관회의” 상정)
- (관행개선 과제) 즉시 조치⇒ 변화 점검
- (하위법령 과제) 시행령·규정은 최대 3개월 내 개정완료
- (법률 과제) 정기국회까지 법안 국회제출 추진